



제298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

**남양주시 공무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
조례안**

[이수련 의원 대표발의]

검 토 보 고 서

2023. 10. .

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공무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이수련 의원 등 열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조례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차별적 처우 금지, 인권과 사생활 보호 등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(안 제5조~제8조)
- 라. 공무원 근로자의 정원, 채용 등 복무에 관한 규정(안 제11조~제24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총무과
- 라. 입법예고 : 2023. 10. 11. ~ 2023. 10. 17. (7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,
- 공무원 근로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의 본청·의회사무국·직속기관·사업소 및 읍·면·동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, 「근로기준법」, 「남양주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」 및 「단체협약」에 근거하여 그 복무,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남양주시의 공무원 근로자는 총 4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,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공무원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의욕 고취에 따른 공공행정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■ 추가자료 1 :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

- 전국 지자체 : 39개 시군 조례 제정
- 경기도 지자체 제정 현황

| 연번 | 지자체 | 조례명 | 제·개정일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 | 경기도 | 경기도 공무원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| 2023.07.18 |
| 2 | 경기도 수원시 | 수원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| 2023.05.18 |
| 3 | 경기도 성남시 | 성남시 공무원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| 2023.02.20 |
| 4 | 경기도 하남시 | 하남시 공무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| 2022.02.25 |
| 5 | 경기도 광명시 | 광명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공무원 전환 등에 관한 조례 | 2018.07.31 |

■ 추가자료 2 :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「인사관리 가이드라인」

- 지난 2020년,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(이하 “공무원 등 근로자”)의 인사·노무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범정부 공무원위원회관련 심의기구가 설치되었음.
- 「공무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」(총리훈령)에 근거하여 2020년 3월 27일 출범한 공무원위원회는 공무원 보상 및 처우 개선과 인사관리(채용·휴가 등) 문제 개선을 목표로 3년간 활동하였으며, 2023년 3월 31일 해체되었음
- 공무원위원회는 2021년 8월 31일 공무원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취업규칙, 단체협약, 각종 내부 지침 등에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배포하였음.

[별첨1]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「인사관리 가이드라인」

☑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 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 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 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 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 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 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 - 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 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 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05조(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☑ 「근로기준법」

제3조(근로조건에 대한 기준)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.

제23조(해고 등의 제한)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, 그 밖의 징벌(懲罰)(이하 “부당해고등”이라 한다)을 하지 못한다.

제34조(퇴직급여 제도)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

여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.

제76조(안전과 보건)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6조(단체협약의 준수)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☑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

제33조(기준의 효력)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.

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○ 「남양주시 공무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」 발의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8조(근로조건외 보장) 시장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로 시간 휴일, 휴가 등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「근로기준법」, 단체협약, 「남양주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」 중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적용한다.
- 제18조(출장)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「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제20조(후생복지)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「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- 조례의 내용이 중 비용 발생과 관련된 부분을 타 규정 또는 단체 협약에 준용할 수 있도록 준거를 둔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비용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

4. 작성자

소속 : 기획조정실 총무과, 직위 : 과장, 직급 : 지방행정사무관, 성명 : 강 혜 숙